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 기획예산담당관 】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8
----------	------

제출연월일 : 2017. 0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 예외사항을 정비하여 입법예고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예외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1항)
- 나. 법령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안 제9조제2항)
 -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변경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행정절차법」 제41조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 가. 입법예고기간 :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1월 16일(21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분
	팀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유순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천정아 (790-528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 부서 담당관·단·과·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신 설></u></p> <p>1. (생략)</p> <p><u>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p>3. (생략)</p> <p><u>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u></p> <p><u>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②·③ (생략)</p>	<p>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 ----- ----- ----- ----- ---. ----- -----.</p> <p><u>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p>3. (현행 제1호와 같음)</p> <p><u><삭 제></u></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u>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청회) ① (생략)</p> <p>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u>준용한다.</u></p>	<p>제9조(공청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따른다.</u></p>

【 관계법령 발췌서 】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